

보도일시	2025.5.25.(일) 즉시 배포
담당처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단장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극우 유튜버들에 ‘보상’ 약속한 국민의힘 이남용 전략기획특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극우 유튜버들에게 부정선거 의혹 여론을 부추기는 행위의 대가로 ‘보상’을 약속한 이남용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후보직속 전략기획특별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이남용 특보는 지난 5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독립언론인 간 정책간담회」에서 참석한 유튜버들에게 “공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이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이거 도와주시면 제가 그 기록을 방송되는 기록을 제가 다 분석해서 사후에 여러분들한테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보상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을 약속하였습니다.

해당 간담회는 이남용 특보와 국민의힘 선대위 홍보본부장인 강승규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이에 참석한 이른바 독립언론인들은 평소 부정선거음모론을 주장해온 극우 유튜버들입니다.

이남용 특보는 해당 간담회에서 “전 유권자의 40-45%가 사전투표를 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개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투표, 우편투표, 사전투표 이 세 가지에서 부정이 일어납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음모론을 거듭 주장하였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들 극우 유튜버들에게 부정선거 의혹 여론 확산을 위한 도움의 대가로서 ‘보상’을 제공할 것임을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남용 특보의 ‘보상’ 발언은 정당 선거조직의 일원으로서 대선 기간 중 극우 유튜버를 통해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시키며 자신들의 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남용 특보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4호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전략기획특별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극우 유튜버들에게 공직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 여론을 형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약속한 이남용을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경찰에 즉각 고발합니다. 민주주의와 공명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피고발인의 법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힘의 각종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끝>